민주 호남 현역의원 공천 탈락자 내주 발표

광주 '여론', 전남 '부정·비리'가 변수로

배제 대상 현역 확정설… 살생부 나돌아

중진·참여정부 장차관 수도권 징발설도

광주·전남지역 공천 배제 현역의원들의 명단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부정·부패·비리 인사들의 공천 배제 기준이 29일 마련되는데다 호남권 중진들과 참여정부 장·차관들의 수도권 징발설도 확산되고 있다.

호남지역 공천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이슈들을 조명해 본다.

◇**공천 배제 대상과 시기**=일단 다음주부터 호남지역 공천 심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에서 다음주 내에 호남 몫으로 사실상 할당된 9명(전북 3명, 광주·전남 6명)의 공천 배제 대상 현역의원들의 명단이 발표될 전망이다.

다음달 9일까지 1차 공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공심위가 호남지역 공천 배제 대상 현역의원들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설과 함께 이들의 명단이 담긴 살생부가 돌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천배제 대상으로 꼽히는 광주지역 현역의원들의 명단은 대동소이한데 비해 전남지역은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부정·비리 공천배제 기준**=공심위는 29일 부정·부패·비리에 관련된 인사들의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심위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전남지역 공천 구도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공천 배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징발설 확산**=박재승 공심위원장의 당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의 수도권 출마 촉구 발언에 이어 박경철 공심위 간사가 이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주장함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박상천 대표의 고흥·보성 공천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도 커지고 있다. 당장 2~3명의 중진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 장·차관들의 수도권 징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광주지역 공천 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이용섭 전 건설부 장관,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두 차출되기 보다는 이들 중 일부만 수도권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매니페스토 설명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성발전센터에서 '입후보 안내 및 매니페스토 설명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제 장관 추가 교체를" "총선용으로 이용 말라"

■여야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공방

여야는 28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성, 통일, 환경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이어 문제가 있는 또다른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교체 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특히 김성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중복게재, 공금유용 등에 대해 본인이 청문회에서 시인했고,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등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추가 교체를 요구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김성이 내정자는 이미 사퇴한 내정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명백한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냈고, 이윤호 내정자도 미등기 전매, 증여세 탈루의혹 등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용납될 수 없는 흠결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도덕성에 치우치는 등 총선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건설교통 등 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주택 구입 문제와 충남 서천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 문제와 경력 위조를 집중 추궁했다.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부동산 정책의 주무 장관이 투기목적으로 고가의 초호화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자회사 채권 보유 문제가 집중 거론된 가운데, 골프 회원권 보유, 장남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장 김종빈 탈락 지역민 실망

'빅 5' 영남 독식에 우려도

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전남 인사의 배제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여수 출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끝내 탈락했다.

28일 공식 발표된 인선에서 경남 출신의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권력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민정수석 등 사정부문 '빅 5'가 모두 영남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특정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호 전 장관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5대 사정 기관장이 모두 영남지역 출신으로 편중됐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남 남해,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은 경남 진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남 고성,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는 경북 안동,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는 경남 진해 출신이다. /임동욱기자 tuim@

■ '이명박 시대' 지방 어젠다

❷ 지방분권 강화하라

국가 경영 지방중심 전환 도·농간 경쟁시대 대비를

'5+2 광역경제권' 취임때 언급 안해

"수도권만 공룡화" 우려 목소리 높아

"이명박정부에는 지방정책이 없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식에서 지방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지방분권 의지가 없거나, 지방정책에 대한 국정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방정책의 키워드로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취임사에서는 지방정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지방분권을 국정철학의 하나로 제시하고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한 것과 대비된다.

도시·지역간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지방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추세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 5년도 어떻게 하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지나치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48.3%로 일본(31.9%), 영국(31.2%), 프랑스(18.9%) 등 OECD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제조업체의 56.6%, 금융(예금·대출) 67%, 공공청사의 85.4% 등 정보·교육·취업·금융·문화 등 제반 여건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는 하지만, 7개 경제권 중 수도권만 독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전국 각지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전략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지방과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국가경쟁력 강화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지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3대분야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조례입법권 범위확대▲중앙·지방의 사무재분배▲자치경찰제 도입▲교육자치제 개선▲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을 요청했다. 중앙~지방 간 상생 방안으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신설▲지방정부협의체 법적기능 부여▲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을 건의하고,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조정▲교육세율 인상▲자주과세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새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방자치 관련 과제는 ▲자치경찰제 도입▲지방 중기청·환경청·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개선 등에 불과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22일 시도지사들과 만나 (지방과) 상생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민간주도·지방중심으로 바꿔서 도시·지역간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정기자 jjnews@